

2000년도 국내 정유산업 회고와 향후 과제



전 기 태
〈 현대정유 업무이사 〉

1. 머리말

새천년의 서막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온 2000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2000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으나, 국내 정유업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련의 한해였다. 석유류 세제, 석유제품 유통시장, 석유제품가격, 석유제품품질 등 석유관련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된 과제들이 일시에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여러 전문 연구소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연구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듯 하다.

새천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주위 여건의 변화정도가 점점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석유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 나가려는 여러 계층의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2000년을 마감하는 지금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고 진행되어온 주요 사안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며, 다가오는 2001년도의 희망을 기약해 보고자 한다.

2. 국내 정유산업 결산과 향후 과제

1) 석유류 가격구조(세제) 개편 방안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환경정책연구원 등 4개 용역기관에서 공동 연구발표한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안)은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의 검토·승인과정을 거쳐 2000. 12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석유류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중 첫 번째 항목으로서 「수송용 유류간 가격구조 개편」을 들 수 있다. 수송용 유류간의 세율 격차가 커서 에너지소비구조가 왜곡되어 있는데, 특히 수송용 LPG(부탄)의 가격이 휘발유의 약 26%에 불과해 LPG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수송용 유류간 가격구조 개편방향으로서, 휘발유 보다 환경오염도가 높은 경유의 가격을 2006. 7월까지 휘발유의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송용 LPG(부탄)의 가격은 2006. 7월까지 휘발유의 60% 수

준까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석유류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중 두 번째 항목으로서 「중유에 대한 특소세 신규부과」를 들 수 있다. 중유는 공해유발효과가 크고 산업용 에너지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LNG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6. 7월 까지 8 당 20원의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표1〉석유류세제개편에 따른 유종간 가격변화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유	중유
현행 (2000.7)	상대가격비	100	47	26	40	22
	소비자가격	1,279	604	337	517	276
	특소·교통세	630	155	23	60	-
2001.7	상대가격비		52	32	43	22
	소비자가격		663	409	548	280
	특소·교통세		185	67	82	3
2002.7	상대가격비		56	38	45	22
	소비자가격		722	480	579	283
	특소·교통세		234	132	107	6
2003.7	상대가격비		61	43	48	22
	소비자가격		782	552	610	287
	특소·교통세		276	189	131	9
2004.7	상대가격비		66	49	50	22
	소비자가격		841	624	641	291
	특별소비세		319	245	154	11
2005.7	상대가격비		70	54	53	23
	소비자가격		900	695	672	294
	특별소비세		362	301	178	15
2006.7	상대가격비		75	60	55	23
	소비자가격		956	767	703	298
	특별소비세		460	411	231	20

주) 2000.12월 국회 상정(안)

그런데, 현실적으로 석유제품의 연산품적 특성상 약 40% 수율의 중유가 불가피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중질

유분해시설은 그 투자비가 막대하고 현 유가수준하에서 투자경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단기간내에 공급과잉되고 있는 중유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유에서 LNG로의 수요이전은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석유류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중 세 번째 항목으로서 「석유화학 부생 연료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확립」을 들 수 있다. 석유화학회사에서 나프타를 분리·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Heavy-End, C9+ 등이 등유를 대체하여 호텔·산업체 등 대규모 직매처에 연료유로 판매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조세의 중립성 차원에서 이에 대해 신규로 특소세 및 판매부과금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그런데, Heavy-End에 대한 특소세 등의 과세액을 등유세율의 73% 수준으로 부과해 나갈 예정이어서 연료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확립에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편,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중유 등에 대한 교육세 부과방안」은 산업용에너지인 중유에 너무 가혹한 부담이며, 또한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LNG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교육세의 도입 여부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2)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발전방안

금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스템의 발전방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동건과 관련하여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현행 석유제품 유통관련 제반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다.

가장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사항은 상표표시제(Pole-Sign 제도)이다. 현행 제도는 단수 Pole-Sign제 또는 무표제인데, 앞으로 복수 Pole-Sign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석유제품 유통시장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한, 향후 언제쯤 상표표시제의 법적 규제를 폐지하고 사적계약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법적규제 대상을 보다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개진과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석유제품 유통제도도 관련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석유사업자별 영업범위와 관련 동일단계의 석유사업자간 수평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문제는 상표표시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기업 및 Brand 가치 제고를 통한 소비자 효익 증대에 효과적인 석유 유통구조의 수직계열화 기조를 지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석유사업자간 수평거래 허용으로 유통경로를 다원화시킬 것인가, 또는 두가지 방안을 적절히 절충할 것인가의 문제로써 석유사업자별 이해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사안이다.

금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시장은 석유제품 유통제도와 관련한 또다른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금년 4월부터 석유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페트로마켓(petro market)을 필두로 오일비드(oilbid), 넷오일(net-oil), 사이버페트로(cyberpetro), 엔페트로(npetro), 한국석유전자거래소(oilpex), 예스오일(yesoil) 등이 생겨났다.

현재까지의 거래실적은 여러 가지의 제약요인과 제반 여건이 미흡하여 하루 평균 10~20여건 수준이며, 거래 금액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 9월1일 OILPEX의 출범과 금년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석유전자상거래시장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유업계에서도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석유전자상거래시장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국내 석유제품가격 평가모형 개발

'99년도 국정감사 이후 석유제품의 내수판매가격에 덤핑수출손실이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 손실전가금액수준도 주장하는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연간 2조원 정도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99년초 10\$/Bbl이던 국제원유가가 '99.2/4분기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00년 하반기에 무려 33\$/Bbl 수준(Dubai유 기준)까지 치솟음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이 국내 정유사 및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국내 정유5사의 '99년도 당기순이익은 7,162억원(정유사업 및 기타사업 포함)으로서 총 자기자본 12조 539억원의 5.9%(자기자본이익율)인데, 동기간의 국내 제조업 평균 자기자본이익율인 8.7%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기 의견차이는 근본적으로 국내 정유사의 고정비를 어떻게 배부하는 것이 맞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국내 유가는 '97년 유가자유화 되기 훨씬 이전부터 소비 지정제주의 특성상 고정비를 내수시장에 배부하여 왔다. 또한 한계시장으로서의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여부 결정은 동시장의 공헌이익(수출가격이 변동비보다 큰 경우) 발생여부로서 결정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정유사는 동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상기 문제점들에 대한 제반 검토를 위하여 「국내 석유제품가격 평가모형 개발」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금년 4월경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연내 최종보고서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4) 군납유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년도 국내 정유업계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98~2000년 군납유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서 지난 10월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래없는 총 1,90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징금 규모는 동 기간중 군납유류 입찰총액인 7,128억원의 26.7%에 달하며, 또한 군납유류는 특성상 민수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JP-8, 혹은기용 경유(DF-1)등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며, 민수와는 달리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수요지역까지 다양한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시기에 직접 수송하여야 하고,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군납유류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너무 가혹한 처분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국내 정유사는 지난 11월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 등을 통해 과징금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5) 0.3% 중유 공급시기 관련

황함량 0.3%이하 중유(이하 "0.3% 중유"라 한다) 공급은 「청정연료등의 사용에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99-192호, '99.12. 3)에 의거 2001. 7. 1일부로 서울, 인천등 전국 14개지역에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2년 7월 부터는 12개지역, 2003년 7월부터는 4개지역이 추가가 되어 총 30개지역에 0.3% 중유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0.3% 중유의 공급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어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첫째, 중질유 탈황시설로 공급하는 방안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공급방안이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탈황시설은 0.5% 수준의 B-C를 생산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설이므로 0.3% 중유 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초심도 탈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심도 탈황시설은 막대한 투자비를 수반하므로 LNG 대비 가격경쟁력의 상실로 무용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초저항 원유로 공급하는 방안

초저항 원유는 동남아 및 아프리카 일부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관계로 0.3% 중유공급을 위한 필요물량에는 절대적인 부족이 예상되며, 원유 및 생산 제품의 유동점(Pour Point) 문제로 인하여 정제단계부터 최종 사용단계 까지 Heating설비 등 시설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B-A 중유를 공급하는 방안

고가의 정유를 중유에 배합함에 따라 0.3% B-A의 가격상승은 필연적이나 LNG 공급가격으로 인하여 가격제한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0.3% 중유공급은 여러가지 제한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국

내 대기질 농도중 아황산가스 농도가 이미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의 하한치인 0.015ppm을 달성한 사례를 고려할 시 더 이상의 중유 황함량 강화를 통한 관리는 그다지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연료의 황함량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은 이제까지 정유사의 탈황시설 확충을 통한 연료사용규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규제는 비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료사용자가 배연탈황시설 설치를 통한 배출규제 중심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3. 맺음말

국제원유가는 지난 11월말부터 급락세를 보이더니 12월에 들어와서는 19\$/Bbl 수준(Dubai유 기준)까지 하락하였다가 현재 소폭 상승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국제원유가의 안정세는 석유산업 및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큰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는 2001년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원유관세율(5%)보다 높은 7%로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및 인접국가에서 소비지정제주의 기초하에 기 실시중에 있는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율 적정화」에 한발짝 다가서게 된 것은 다소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바람직한 토대위에서 국내 정유사는 향후 정유산업의 투명성을 더욱더 제고시키고, 정유산업의 현황 또는 실상을 여러 이해계층에 보다 더 널리 알려져 국내 소비자 및 고객들에게 친근감을 갖고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어야 하겠다.

끝으로, 정부는 2000년도에 진행되어 왔던 많은 사안들에 대한 검토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감안하여 2001년도 부터는 관련제도 변경 및 법령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의 무리없는 정착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제도 개혁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건의드리면서 이 글을 맺는다. ♣